김영록 지사 "지방분권 실현이 지방소멸 해법"

전략포럼서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소개

정부에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다시 촉구

'국가출생기본수당' 제안…기본소득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등 국가 차원의 '구조적 개편'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 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전략포럼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직면했고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1조3천817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시·군이 공동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2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저출생 대응의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유사 정책 시행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이뤄냈다"며 '국가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출산·육아의 공동책임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도 소개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원에 신축 아파트를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남도의 대표적 주거 정책이다.

김 지사는 "전남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만원주택'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 곡성군·영광군에서 시작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2030년까지 23GW 규모의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을 통해 햇빛·바람연금 등으로 도민과 수익을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사업을 모범 사례로 잘 만들어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책의 표준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남도가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지역 합계출산율 1.13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감소 추세에서 반등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인허가·예산·입법 권한이 중앙에 묶여 있다. 산업단지 지정, 사회보장제도 승인, 규제 해제 등 핵심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인 상태"라며 "여기에 지방의 의사와 입장을 국정에 반영할 제도적 통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독일의 상원제도 사례를 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구 문제를 국가 정책의 중심에 놓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해결의 길을 찾자"며 "전남도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오후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에서 열린 '제13기 도민명예기자 역량 강화 워크숍'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민명예기자, 생활 밀착 홍보 앞장

여수서 워크숍…현안 공유 등 역량 강화

전남도는 20일까지 이틀 간 여수에서 제13기 도민명예기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어 도정 주요 시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민 생활 밀착 홍보를 강화한다.

도민명예기자단은 전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도정 시책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현장을 취재해 도정소식지(새뜸)와 도 누리집에 게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워크숍에선 유공 명예기자 전남지사 표창, 올바른 글씨기, 생성형AI 협업하기 등 명예기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명예기자는 "기사 작성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생생한 현장 취재와 양질의 기사를 더욱 다양하고 즐겁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제13기 도민명예기자는 총 138명(지역 기자 107명·향우 기자 31명)으로 구성됐다.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역·연령·성별을 안배하고 청년기자를 전체의 22%(31명)로 대폭 확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국 곳곳에서 주민과 살아 숨 쉬는 소통을 하는 도민명예기자의 적극적인 활동과 성원 덕분에 전남도가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전남도의 특별 메신저로서 더 큰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전남의 빛나는 성과와 현안 등을 적극 홍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미래산업엑스포' 25-28일 열린다

호남 최대 산업展 270개사 570개 부스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가 오는 25-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엑스포는 ▲국제그린카전시회 ▲국제뿌리산업전시회 ▲국제IoT가전로봇박람회 ▲드론·UAM 전시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호남권 최대 산업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270여개 혁신기업이 570개 부스를 운영한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로봇·가전제품 등 최신 기술을 볼 수 있으며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기술테크관'을 통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중심공장(SDF) 구축의 핵심 요소인 AMR·MPR(물류 모빌리티 로봇) 기술, 수요자 맞춤형 차량(PV5), 수직이착륙 UAM(미래항공모빌리티) 모형기 등을 선보인다.

또 '미래산업융합포럼'에서는 AI융합 모빌리티 신기술, 전기차 화재예방 서도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기술 등 첨단 분야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가 이뤄진다.

개막일인 25일은 밤 8시까지 야간 개장하며 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광주지역 산업단지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일반 관람은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변은진 기자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감대 확산 나서

동부지역본부서 설명회

전남도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부권 도민설명회를 19일 동부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사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국회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와 정부·국회 대상 건의활동 전개 등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전남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엔 전남도의회 정영균·한숙경 의원, 도내 사회단체·유관기관, 마을대표, 민원메신저, 시·군 공직자 등 400여명의 도민이 참석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취지 및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알려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관심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특별법에 담은 주요 특례를 소개하고 전남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에 실질적 자치권한을 넘겨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재정 기자